<도전'93 : 국가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매국노들의 가슴앓이(Ⅰ)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가 불황카르텔에 합의했다고 한다.
우여곡절의 논란끝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PE · PP 2개 품목(사실상 LDPE · LLDPE · HDPE · PP 등 4개 품목)의 국내 공급가격을 국제가 수준으로 15%정도 인상하고, 공급량도 분기별 수요에 맞춰 조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림산업과 유공이 기초유분의 수급조정 및 수출 일원화 등 선행조건을 내세워 합의를 미뤄왔으나 추후 합의 도출이 안 될 경우 탈퇴한다는 조건을 명시, 일단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가 극심한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에 따라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합의한 불황카르텔은 정부의 불인정 방침과 아울러 석유화학기업들의 의견 불일치로 정식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황카르텔 결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다음 두가지의 목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첫째는 공급과잉 · 가격폭락으로 경영난이 극심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가격인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는 자유경쟁시장 원리에 입각한 가동률 조정에 따른 공급량 조절을 택하기 보다는 가동률은 자율에 맡긴 채 국내 공급량만 조절, 가격을 인상시키는 방안에 집착해 있는 상태로 국민정서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는 수요처인 플래스틱 가공업계에 대해 불황카르텔을 추진하고 있으니 가격인하 압력을 그만두고 기존 거래선과 선의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간접적 압력을 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와 같은 구매방식을 계속할 경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정상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협박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 압력은 현재의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의 원인이 어디에서 연유하고 그 책임이 어느쪽에 있는가를 망각한 그릇된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결코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의 현실을 망각한 상행위나 산업 발전상의 무책임성, 장기 발전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 보호해 주어야 할 당위성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대기업들이 담합해 정상적 상거래를 위협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황카르텔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무사안일한 사고방식과 함께 무책임한 상공부 관료들의 주먹구구식 그리고 반민족적 행정행위가 한데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이다.
상공부는 87년과 88년 2년에 걸쳐 석유화학공업 발전 민간협의회 (위원장 김영욱 현 생산기술연구원장) 라는 자문회의를 12차례나 소집, 석유화학 투자자유화 문제를 논의하고 민간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으나, 결과는 전혀 아니올시다 로 나타났다.
88년 11월27일 상공부는 1차로 대한유화에 에틸렌 기준 25만톤 규모의 NCC(나프타 분해센터) 건설을 허가 (공식적으로는 행정지도)했고, 89년 2월23일에는 호남석유화학에 35만톤 규모의 NCC 건설을 허가했다. 또 90년부터 석유화학 투자를 자유화했다.
이러한 결정은 민간협의회의 단지별 기초유분 수급 우선고려 라는 건의를 받아들이고, 경제 자유화를 역행하지 않는 정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안을 들여다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당시 울산과 여천단지의 기초유분 수급상 불균형이 심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점이나, 상공부가 우선적으로 NCC 건설을 허가한 대한유화 및 호남석유화학은 일본과 합작기업으로 일본기업들이 지분의 50% 안팎을 지배하고 있었고, 합작기업 특유의 나눠먹기로 유보율이 거의 제로 상태에 머물러 4000억원 안팎이 소요되는 NCC 건설은 애당초 부적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공부는 단지별 기초유분 수급상 우선적 고려대상이라는 명분으로 이들 2개 기업에 NCC 투자를 허가했고, 그 결과 대한유화는 부도 일보직전에서 법정관리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으며, 호남석유화학은 경영난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상공부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석유화학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아래 불황카르텔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사실은 그들의 투자자유화정책의 조급성 및 오류 그리고 기존기업들의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황카르텔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시 박영대 기초공업국장과 엄영수 석유화학과장이 뇌물 의 대가로 콩밥 신세가 돼 있어 그 책임의 일부를 면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상공부의 매국노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된다는 점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점 강조해 둔다.

<화학저널 1993/10/25>